

# 축산물 유통현황과 문제점

## — 가격정책전환과 유통시스템 개선방안 —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축산물 유통현황과 문제점 조사 보고”를 발표하였다.

축산업이 불황에 들어서면서 부터 생산지 값은 폭락하는데도 소비자 값은 별 변동이 없어 유통개선문제가 대두되었다.

또 축산물이 주식화됨으로 이조말엽의 유통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대량 유통이 어렵게 되었다는 등 축산물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요약을 전제하며 유통에 관한 더욱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분은 (22-6917) 본회로 연락을 바랍니다.

최근 몇년 동안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제가 갖추어 지지 못한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농업정책의 주목표는 미곡증산·자급화에 있었기 때문에 축산부문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축산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자의 축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우량한 가축두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료자원개발이 부진한 가운데 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왔다.

그러므로 축산물유통은 양축농가(소득증대)와 유통업자(이윤극대화) 그리고 소비자(가

계안정)등 서로 다른 경영주체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득의 최적배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양축농가의 성장·발전과 복지를 같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축산물 유통시장은 생산과 소비측면의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인 정체를 보임으로써 전반적인 축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축산물의 유통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정부의 직접개입 또는 행정력을 통한 무리한 가격안정대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물가억제 또는 안정을 위한 제반

단기적 행정조치 및 수입확대 또는 비축량의 低價放出은 一見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유통시장을 歪曲시킴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을 심화하여 정부개입의 지속적인 확대를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부개입에 의한 무리한 가격안정은 생산기반의 확충을 저해하고 양축의욕을 감퇴시키는 한편 소비증가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과도한 정부개입 및 행정조치는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전전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로는 축산물의 기본적 특수성을 도외시한 정부 또는 각종 공공기관의 유통부문 참여를 들 수 있다. 축산물의 부패변질성, 품질의 불균일성 등을 고려할때 유통담당자는 고도의 상업적기능발휘자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기관이 이를 담당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주로 한 수매·비축기능의 과도한 의존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능률의 저하는 물론 과도한 재정지출을 불가피하게 하는 한편 합리적인 자원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로는 중간상인에 대한 편리한 책임전가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떠난 여러가지 해결책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중간상인은 생산농가나 소비자 또는 사회로부터 제 일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흔히 농산물의 유통마진은 중간상인의 과도한 이윤획득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가격의 폭락이나 폭락은 상인의 가격조작이나 매점매석에 있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생산의 과다 또는 과소에 있는 것이며 축산물의 상품적 특성을

고려할때 중간상인은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에 편승하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유통마진은 소 26.1%, 돼지 37.9%, 생계 31.0%, 계란 14.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유통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상업이윤은 소가 16.6%, 돼지가 25.2% 생계가 24.5%, 계란이 11.0%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반정육점의 유통마진은 20.2%이며 이중 유통비용이 6.8%, 순수한 상업이윤이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유통마진이 일반공산품에 비해 과연 과대한가는 차치하고 축산물 유통마진의 상당부분을 상이이윤 특히 그중에서도 소매상의 상업이윤이 차지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같이 소매상의 상업이윤이 높은 이유는 소매상의 경영 규모가 영세·과다한데 있고, 또한 소매상의 경영규모가 영세·과다한 것은 부패·변질·손상되기 쉬운 축산물 특유의 속성때문에 소비자들이 인근 소매점에서 소량으로 자주 구입하는 데서 오는 소비수요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나 유통마진의 과다 문제에 있어서 상인조직에 대한 과도한 문책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진단의 소산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축산물 유통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생산자·중간상인·소비자의 상형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과 소득분배를 담당하는 기능으로서의 축산물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가격안정과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능률향상은 현재와 같은 축산물의 가격정책과 축산물의 유통조직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축산물 가격정책의 전환

정부당국은 쇠고기 소비억제와 돼지고기값 하락에 따른 양축농가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행정지도가격제를 철폐하고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격에 따라 수시로 소매가격을 변동키로 한 육류가격의 연동제를 금년 3월(쇠고기 가격 연동제)과 4월(돼지고기 가격 연동제)이후부터 각각 실시중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정책변화는 종래 아무런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였던 행정지도가격제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양축농가의 장기에 걸친 소득지지와 이를 통한 식육자급화의 실현 또는 육류가격의 안정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축산물이 안정적 공급이 현실과 장래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정부당국의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때, 축산물 가격정책은 가격억제 및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산기반조성정책위주로 정책전환을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유리한 수치가격을 보장하여 증산유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생산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외국산육류의 도입을 자유화하되 도입된 수입육이나 국내산 육류의 실제 판매가격은 국내산 육류의 생산비에 축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에 따라 산정된 적정한 보호관세율을 포함한 가격을 판매가격의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 가격수준 이하의 생산비로 육류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양축농가는 수익성이 보장되어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생산비가 드는 비효율적인 양축농가는 이를 과감히 도태, 타업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육류가격심의위원회는 일상적

인 개입과 간섭, 규제없이도 육류가격안정은 물론 이 가격수준에서 육류의 공급은 국내생산 및 수입을 통해 안정될 수 있고 양축농가의 소득지지와 축산업장려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축산물 유통 시스템의 개선방안

첫째, 복잡다단·다기화 되어있는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개별 생산농가의 영세출하규모를 집단화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자생적인 조직(단체나 조합)에 의해서 축산물이 수집되어 대도시도매시장에 직접운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既存의 농협이나 특수조합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비영리단체들의 선도적 노력에 기지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대도시에는 축산물의 수집과 분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축산물류별 도매시장을 설치하고, 도매시장의 운영은 비영리기관이 담당해야 하며, 도매시장내에서는 일철의 불안전경쟁요인을 제거하고 공정한 거래제도를 철두철미하게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도소매단계에서 요구되는 등급이나 포장의 가능하도록 시설을 근대화 하고 시장정보도 전산화하여 전국에 신속·정확하게 알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운영비는 수수료에서 충당해야 되겠지만 도매시장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수료를 최소화 하는 노력등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중간상인의 영세성에서 발생하는 축산물의 단위당 과다마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형수퍼마켓이나 일반종합식품점 건설의 확대를 적극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축산물도소매점 허가제를 신고제나 등록제로 완화하고, 필요한 시설은 의무화 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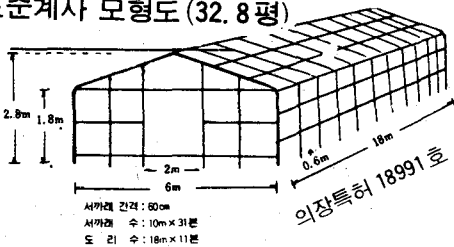
동업의 도소매점 상호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상점간의 지역적 거리유지를 고려하여 상점허가를 안배하고 있는 허가당국은 오늘날 자유경제질서의 기본이 경쟁에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지않나 생각된다. 소비자에게 상점선택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줄수록 바람직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넷째, 물적유통기능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수송수단개발과 저장시설의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축산물가공업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건설과 포장 또는 통신망의 설치 등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물적유통부문중에서 개별 유통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부문은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소비자들에게 어떤 소비행위가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입시 상점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비싼 곳은 가지말고 다소 거리가 있고 불편하더라도 싼곳에서 식품을 구입하도록 제몽하며, 하나의 축산물가격이 수급불균형이나 다른 이유로 비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대체관계에 있는 축산물을 먹게 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도록 홍보활동을 통해 제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계사용 파이프 하우스

표준계사 모형도 (32.8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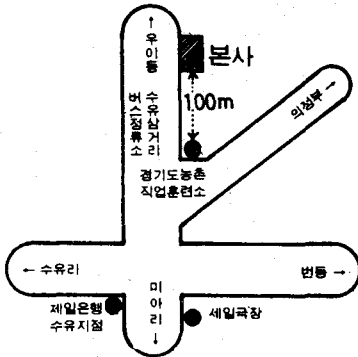
### 1. 파이프의 특징

φ 22mm, φ 25mm 펜타이트파이프(특수아연 도금 파이프)를 사용하여 녹슬지않고 수명이 깁니다.

### 2. 완전 조립식

독창적 조립부속품으로 일체 용접없이 조립, 해체와 이동이 간단합니다.

- ★ 희망규격·설계·시공 상담드립니다.
- ★ 지붕덮개(보온덮개)를 적시에 공급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파이프 하우스 제조 전문 메이커

## 풍념산업주식회사

서울·도봉구 주유동 223-41 TEL. 989-4933  
989-0893